

## 노사문제의 현황과 기독교사회윤리학적 대안

김희수

(천안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에 대한 분석

1. 월평균 급여
2. 실질임금과 근로시간 비교
3.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4.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외 비용
5. 외국 및 국내 기업의 한국 투자기피
6. 실업문제
7.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 III. 분배정의를 위한 윤리학적 고찰

1. 공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그 문제점
2. 정부의 역할: Reinhold Niebuhr의 힘의 균형 논리
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

### IV. 결론: 종합적 분배정의론

---

• 국문초록 •

---

임금인상과 복지향상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주장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으며, 때로는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극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일정 시점까지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그러한 요구가 경제전반에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분배의 적절한 수준인가?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한쪽의 요구나 단편적인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만 분배의 적정선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능력, 국가의 전반적 경제력, 해외시장에서의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안정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은 각종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근로시간, 임금, 노동생산성, 임금외 비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독교사회윤리학의 이론들에 의거하여 분배정의를 이루기 위한 종합적 원칙들을 모색한다.

주제어: 분배정의, 노사갈등, 기독교사회윤리

---

## I. 서론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조사한 소속 계층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소속 계층의식 설문<sup>1)</sup> (단위: %)

계 층	상	중 상	중	중 하	하
1994년	0.8	7.9	52.7	24	14.6
2003년	0	8.9	34.7	38.7	16.1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도 8월 현재 자신이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중상층도 8.9%에 불과하였다. 중간층이 34.7%, 중하가 38.7%, 그리고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6.1%였다. 한국갤럽이 10년 전인 1994년에 조사한 자료와 비교하면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매우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중간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8% 줄어든 반면 중하층과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4.7%와 1.5%씩 늘어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전체적으로 5명중 1명꼴)이 계층 하락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표2>에서 보듯이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

1)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조사 참가자 1000명), 조선일보 2003. 9. 3.

2) 자료: 노동부

특이사항 분석: 1. 1984년도까지는 체불임금에 대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전 기간에 걸쳐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에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매우 거세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 기간에 걸쳐서 전체 노사분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금인상과 관련된 것이었다(48.75%) 3. 1991년 이후에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분쟁이 사라짐으로서, 그때 이후 근로환경 등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1995년 이전에도 단체협약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의사결정, 경영참여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1998년 이후부터 IMF사태의 영향을 받아 구조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분쟁건수와 주요원인<sup>2)</sup>

연 도 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	2001	2002	전 체	
분쟁건수	892	7,779	1,056	578	250	235	322	11,112	
주요원인	채불입금	<b>456</b>	272	59	49	7	6	2	851
	비율 %	<b>51.12</b>	3.49	5.58	8.47	2.80	2.55	0.62	7.65
	입금인상	120	<b>4,460</b>	<b>550</b>	138	47	59	44	<b>5,418</b>
	비율 %	13.45	<b>57.33</b>	<b>52.08</b>	23.87	18.80	25.10	13.66	<b>48.75</b>
	근로조건개선	100	818	(’90-’91)4	0	0	0	0	922
	비율 %	8.92	10.51	0.37	0	0	0	0	8.29
	단체협약	141	995	248	<b>308</b>	<b>167</b>	<b>149</b>	<b>249</b>	<b>2,257</b>
	비율 %	15.80	12.79	23.48	<b>53.28</b>	<b>66.80</b>	<b>63.40</b>	<b>77.32</b>	<b>20.31</b>
구조조정	0	0	0	(’98-’99)39	22	15	8	84	
비율 %	0	0	0	6.74	8.80	6.38	2.48	0.75	

로자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국민들의 의식 속에 팽배해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 그리고 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 비자금 형성, 거액의 정치자금 헌납 등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이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근로자들의 투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으며, 때로는 분신사살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근로자들의 공정한 분배 또는 더 많은 분배에 대한 요구가 어느 시점까지는 정당한 것이었고 또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인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주장이 경제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서로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어느 한쪽의 요구나 단편적인 조건의 산술적인 수치에 의해서 분배의 적정선을 결정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여건, 즉 기업의 능력, 국가의 전반적 경제력, 해외시장에서의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안정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

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모두의 공존과 복지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각종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근로시간,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윤리적인 이론들에 의거하여 분배정의를 이루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모색하며, 정의사회 실현과 국가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 II.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에 대한 분석

### 1. 월평균 급여

제조업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급여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70년대 불과 6만1천원에서 90년대에는 114만7천원, 2001~02년중에는 180만5천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3.1~6월중 198만원으로 1970년(1만4천원)의 약 138배로 상승(33년동안 연평균 16.7% 상승)하였다.

<표 3>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sup>3)</sup> (천원, %)

	1970	1971~80	1981~90	1991~2000	2001~02	2003.1~6
제조업	14	61(26.5)	322(15.1)	1,147(10.6)	1,805( 9.2)	1,980(10.6)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의 평균

3) 자료: 한국은행공보 2003-10-1호

## 2. 실질임금과 근로시간 비교

<표4>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 제조업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971~90년 중 약 230시간이었으나 1986년 이후 계속 단축되어 2001~02년 중에는 209시간으로 짧아지고 2003.1~6월중에는 206시간으로 더 짧아졌다.

〈표4〉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sup>4)</sup> (시간, %)

	1971~80	1981~90	1991~2000	2001~02	2003.1~6
제조업	225.4( 0.0)	231.1(-0.6)1)	211.3( 0.0)	208.5(-1.7)	206.4( 0.4)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의 평균

우리나라 제조업 상용근로자(10인 이상 사업체기준)의 1970~2003.1~6월중 실질임금과 근로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표5>에서 보는 것처럼, 1971~86년 동안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근로시간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1986년 이후부터는 과거와 달리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특히, 1999년 이후 시간당 실질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2003.1~6월중 제조업 상용근로자(10인 이상)의 시간당 실질임금과 근로시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1970~1986년 상관계수는 0.711, 1987~2003.1~6월 상관계수는 -0.794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7~2003.1~6월을 외환위기 발생시기인 1998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구분하여 상관계수

## 4) Ibid.

주 1): 1981~1986년까지는 연평균 0.5% 증가하였으나 1987~1990년에는 연평균 2.4% 감소하였기 때문에 80년대 증가율이 -0.6%로 나타남. 이는 법정근로시간이 1953~88년까지는 주당 48시간이었으나 1989년 주당 46시간, 1991년 주당 44시간으로 점점 짧아진 데다가 최근 주5일제 도입 확산 등에 기인함.

를 보면 1987~1998년까지의 상관계수는 -0.901이고 1999~2003.1~6월  
까지의 상관계수는 -0.975로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과 근로시간간의 상  
관관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9~2003.1~6월중 제조업 상용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이 1987~1998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  
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시간당 실질임금과 근로시간간의 상관계수<sup>5)</sup>

1970~1986년	1987~2003.1~6월	<1987~1998년>	<1999~2003.1~6월>
<b>0.7105(0.001)</b>	<b>-0.7938(0.0003)</b>	<-0.9009(0.0001)>	<-0.9747(0.0155)>

주: 피어슨 상관계수(유의확률), 유의확률<0.01이면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임

### 3.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1971~2003.1/4 중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과 노동생산  
성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표6>이 보여주고 있듯이,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이 1971~1990년 중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었으나 1991~2000년 중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았으며 2000년 이  
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다시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아지는 추세  
로 반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설비 자동화 도입 등에 따라 90년대  
에는 실질임금 상승률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노동  
생산성이 둔화되어 2001년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아  
졌다.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의 국가별 노동생산성 비교  
결과, 한국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0위로 나타났다.<sup>6)</sup>  
2003년 1분기 중 시간당 명목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나 올랐으

5) Ibid.

6) 한국생산성본부, 2003. 1. 2.

나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에 그쳤다.<sup>7)</sup> 임금이 노동생산성 향상의 3~4배 이상 뛰고 있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앞지른 임금인상의 일방독주는 기업경영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며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도 주변 경쟁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비해 최고 10배에 달한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계속 웃돌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sup>8)</sup>

<표 6>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sup>9)</sup> (%)

	1971~80	1981~90	1991~2000	2001~02	2003.1/4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A)	8.9	9.1	5.3	7.4	7.3
노동생산성 증가율 <sup>1)</sup> (B)	8.3	8.0	11.9	6.1	3.0
A-B	0.6	1.1	-6.6	1.3	4.3

#### 4.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외 비용

<표 7>은 국가 간의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표이다. 표에서 보느냐와 같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외 비용<sup>10)</sup>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노동비용총액<sup>11)</sup> 중 임금이외 비용의 비중이 1985년 9.7%에서 2001년 29.6%로 큰 폭(3배) 증가하였으며, 다른 국가

7)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3. 7. 28.

8) 조선일보, 2003. 7. 28.

9) Ibid.

주: 1) 물적 노동생산성(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준) 단, 2002년 이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10) 임금이외 비용: 임금이외에 사회보험 지출 등 법정보험제도, 협약 또는 사적 복지제도에 따른 사용자 분담금으로 의료·산재·고용보험료, 학비보조비 및 각종 지원금 등이 이에 속한다.

11) 노동비용총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과 법정 보험제도, 협약 또는 사적 복지제도에 따른 사용자 분담금 포함.

들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7〉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외 비용 비중 국가간 비교<sup>12)</sup>  
(자국통화기준, 단위: %)

	1985	1987	1988	1989	1990	1995	2000	2001
한국	9.7	10.1	9.5	11.1	12.3	15.8	29.6	29.6
대만	6.5	7.4	7.4	7.4	7.4	9.1	9.1	9.1
일본	12.6	12.9	13.1	13.3	13.5	14.7	16.0	16.0
미국	19.9	19.9	20.1	20.3	20.8	21.6	20.7	20.6
영국	15.1	15.0	14.6	14.6	15.1	13.6	15.7	15.5

### 5. 외국 및 국내 기업의 한국 투자기피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순 외국인 직접투자’<sup>13)</sup>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1년(4조9000억원)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2003년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1분기 순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의 14%선에 불과한 1172억원(잠정 집계)으로 추락했다. 여기에도 국내 제조업체들마저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투자 대열에 나서면서 산업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sup>14)</sup>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주한 외국 기업인들은, 아래 <표8>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로자 문제(노사문제 32%+ 고(高)비용구조 14% = 46%)가 한국투자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세계는 한국을 전투적인 노조 공화국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전체

12) 자료: USA, BLS, Hourly Compensation Cost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한국은행공보 2003-10-1에서 재인용.

13)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에서 한국을 빠져나간 유출액을 뺀 액수.

14) 조선일보 2003. 9. 3.

근로자 중 노조 가입 비율이 12-13%에 불과한데 노사분규가 심각해 투자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sup>15)</sup>

〈표 8〉 외국인(기업) 한국 투자진출시 주요 장애요인<sup>16)</sup> (단위: %)

주요 장애요인	노사문제	복잡한행정규제	고(高)비용구조	복핵문제
%	32	20	14	8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내 기업들마저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영환경 때문에 투자를 극력 자제하며 현금만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511개 상장 기업들의 올 상반기 현금 보유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20% 정도나 늘었다. 그러나 <표9>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내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대신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부쩍 힘을 쏟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나 증가했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정부가 투자를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 쪽으로 출자총액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로 아예 기업 문을 닫거나 중국 등으로 옮기는 회사들이 속출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sup>17)</sup>

15) Ibid.

16) 자료: 산업자원부 설문조사(2003), 조선일보(2003. 9. 3)에서 재인용.

17) 조선일보, 2003. 9. 3.

〈표9〉 국내 설비투자 추이<sup>18)</sup> (단위: %, 전년동기대비)

분 기	2002년				200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설비투자	3.8	7.5	7.8	8.2	1.6	-0.8

## 6. 실업문제

〈표10〉은 2003년 7월중 연령별 실업자 수이다. 이 중 청년 실업자 수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49.3%)를 차지하며, 청년층 실업률(7.5%)이 전체 실업률(3.4%)의 두 배가 넘는다.

〈표 10〉 2003년 7월중 연령별 실업자 수<sup>19)</sup>

연 령	15-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합 계
실업자수	38만 5천	17만 8천	13만 2천	6만 5천	2만 1천	78만 1천
실업률	7.5%	2.8%	2.1%	2.0%	0.9%	3.4%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업체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2003년 6월에 44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6.4%가 2003년도 3분기(7-9월)에 직원 채용계획이 아예 없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04년 2월에 졸업하는 대학생 수는 30여만 명인 반면, 대기업의 채용계획은 그 2%에도 못 미치는 5700여명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LG경제연구원 조용수 박사는, “결국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길은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한다.<sup>20)</sup>

18) 자료: 한국은행, 조선일보(2003. 9. 3)에서 재인용.

19) 자료: 통계청, 조선일보(2003. 8. 14)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통계자료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조업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실질임금이 상승한 반면에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임금이외의 비용 또한 현격히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로써 미루어볼 때,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무리한 권익주장을 계속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임금 및 임금이외 비용(사용자 부담금)의 증가와 전투적인 노조활동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에서의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내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결국 대량 실업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독이 될 것이다.

#### 7.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하여 국민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3년 5월 1일에 전 국민 1천명(20~64세, 남성 51.2%, 여성 48.8%)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노동운동 자체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 10.5%가 매우 찬성, 47.6%가 대체로 찬성한 반면, 31.4%가 대체로 반대, 8.3%가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58.3%가 노동운동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

20) 조선일보 2003. 8. 14.

노동운동이 국가의 민주화, 분배정의 실현, 기업경영의 투명화 및 합리화, 정경유착 개혁, 인사의 공정화 등을 실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66.6%의 응답자가 나쁜 편 혹은 매우 나쁘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1989년 약 59.9%가 나쁘다고 응답한 것보다 6%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현재의 노사관계가 국민들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 매우 찬성 21.1%, 대체로 찬성 33.5%, 대체로 반대 32.9%, 매우 반대 11.3%로 과반수이상(54.6%)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1989년 조사 시 나왔던 과반수이상(64.1%)의 반대 의견(매우 찬성 12.5%, 대체로 찬성 22.7%, 대체로 반대 37.6%, 전적으로 반대 26.5%의 의견)과 대비되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그 기간동안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볼 때, 비록 다수의 국민들이 노동운동이 국가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는 있을지라도,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고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분배정의를 위한 윤리학적 고찰

근로자들의 권익주장이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국가 경제 전반이 위기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 내며, 사회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들이 합리적이며 옳은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모두 한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기 쉽다.<sup>21)</sup> ‘가장

21)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New York: Scribner, 1943, 1964),

합리적인' 사람들조차도 정의에 대한 타락한 개념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sup>22)</sup>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제시하는 정의의 논리도 각자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논리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계산과 판단에 의거하여 사회적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sup>23)</sup> 환상에 빠지지 않는<sup>24)</sup>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 1. 공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그 문제점

수출증대, 국민총생산액 증대, 기업이윤의 극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된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은 다분히 공리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공리주의의 '공리/효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utility)'은 최대다수를 위해 선이나 이득의 양이 악이나 손실의 양을 최대로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규범이나 방법에 의거하여 행동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에 있어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성취와 최종결과이다. 그러므로 최대의 결과를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행동이나 정책이야말로 정의롭고 옳은 행동과 정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공정한 분배를 무시할 수 있는 중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두 기업가가 있는데, 기업가 A는 노동자들에게 싼 임금을 주고 싼 단가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시장에서 1200이라는 순 이익을 얻었

vol. 2, p. 252.

22) D. B. Robertson, ed.,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76), p. 71.

23)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New York: Scribner, 1932, 1960), p. 32.

24) Ibid., p. 237.

다. 그러나 기업가 B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고 약간 비싼 단가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1000이란 순 이익을 얻었다. 두 경우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공리주의의 입장은, 비록 정당한 분배가 무시되었을지라도, 당연히 기업가 A의 방법론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기업가 A는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한 달간 일을 시켰다. 그러나 한달 후에 A는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약한 임금을 주기를 거부하였다. A는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주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결과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역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최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윌리엄 프랑케나는 이러한 공리주의의 약점을 분배정의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어떤 행동이나 방법, 또는 규범을 따르는 것이 전체 세계에 선의 양을 최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분배하는데 있어서는 불공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좀 덜 큰 결과를 생산하게 될지라도 공정한 행동이나 방법, 또는 규범 수행이 더 선호할만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공리/효용성뿐만 아니라 정의도 포함된다.”<sup>25)</sup> 결과적으로, 분배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리/효용성의 원칙이외에도 공정한 분배를 강제하는 규범론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분배를 위해 투쟁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통계수치들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권익을 주장하는 것

25) William K. Frankena, *Ethics*,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73), p. 41.

은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 2. 정부의 역할: Reinhold Niebuhr의 힘의 균형 논리

니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트로이트 지역의 당시 상황은 근로자들이 기업가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니버는 약자인 근로자들이 조직적인 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정부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정부가 근로자들과 각종 이익집단들의 과도하고 무법적인 권익주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법과 공권력을 엄정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의를 이룩함에 있어서 니버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힘의 균형을 이룸’이다. 니버는 힘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때에 부정의가 생겨나게 될 것을 주목하였다.<sup>26)</sup> 그러므로 사회조직 속에서 정의를 이룩하는 것은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힘의 균형과 질서를 이루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부정의에 의한 희생자들의 힘을 증가시켜주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sup>27)</sup>

그러므로 니버는 정의는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 힘 또는 억제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고 생각하며 “정의는 오직 경쟁하는 힘들 사이에 건진

26) Robertson, *Love and Justice*, p. 199.

27) John Bennett, "Reinhold Niebuhr's Social Ethics," in *Reinhold Niebuhr: His Religiou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ed. Charles W. Kegley and Robert W. Bretall (New York: Macmillan, 1956), p. 60.

하고 균형 잡힌 형평성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sup>28)</sup> 니버는 경제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참여와 힘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 충돌하는 힘들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하는 정의의 구조는 조직과 질서를 이루어내는 힘 또는 정부와 힘의 균형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sup>30)</sup> 바로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층, 기업가, 근로자들이 이기적 논리에 근거한 권익주장을 버리고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법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권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 John Rawls의 평등한 기회의 부여와 약자의 이익 최대화 전략

우리는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표방하고 있으나,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빈곤층 등의 복지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로울스의 ‘공평함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논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로울스의 이론은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설과 칸트의 의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는 사회계약론적인 측면에서 칸트의 자율적인 선택의 개념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윤리원칙의 기초로 삼고 있다.<sup>31)</sup>

28) Robertson, *Love and Justice*, p. 52.

29) Ibid., pp. 92-93.

30) Niebuhr, *Nature and Destiny*, vol. 2, p. 257.

3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로울스는 여기에서 20세기초를 장악하고 있었던 두 이론, 즉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직관

로울스는 계약에 참가하게 될 대표자들이 자신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sup>32)</sup> 예를 통하여 그의 ‘공평함’의 논리를 전개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대표들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이룩하기 위한 원칙들을 선택할 것을 주장한다. 이 대표들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중립적 위치에 있고,<sup>33)</sup>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sup>34)</sup>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취하게 될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보다 더 많이 성취하게 되어도 시기하지 않을 사람들이어야 한다.<sup>35)</sup> 자신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이 대표들은 단지 두 가지만 알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들이 속한 사회가 재화의 희소성 문제와 서로 다른 그룹들이 추구하는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정의를 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sup>36)</sup> 둘째로 그들은 경제 이론과 사회 조직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37)</sup>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가상적인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로울스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원칙들을 선택하게 하면 그 대표들은 다음 두 가지 원칙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그들은 ‘평등한 자유의 보장’을 선택할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만 자유가 제약될 것이며 그 이외에 경제적 또는 다른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는 자유는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sup>38)</sup>

---

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된 목표는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 제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2) Ibid., p. 12.

33) Ibid., pp. 144f.

34) Ibid., p. 143.

35) Ibid., pp. 143, 148-149.

36) Ibid., p. 137.

37) Ibid., pp. 137f.

둘째, 그들은 ‘차이의 원칙’을 선택할 것이다. 이 사회는 분배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등은 인정하게 될 것이나 오직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약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차등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sup>38)</sup>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선택과 계약을 끝내고 ‘무지의 베일’을 걷어냈을 때 자신들이 어느 입장에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대표들은 가장 취약한 입장에 서게 될 사람들의 삶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정의의 법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로울스는 이것을 ‘약자의 이익 최대화 전략(the strategy of ‘maximin’—maximize the minimum)’이라고 부른다.<sup>40)</sup> 로울스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과, (그들 자신이 어느 세대에 속하게 될지 모르므로 한세대가 모든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원을 저축하는 ‘공정한 저축의 원칙’을 두 번째 원칙에 포함시킨다.<sup>41)</sup>

분배의 기준으로써 능력이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케나가 지적하듯이 능력과 필요를 고려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원칙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배의 양을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층, 장애인, 고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장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분배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설과 제도가 마련되어

38) Ibid., p. 302.

39) Ibid., pp. 15, 152-156.

40) Ibid., pp. 152-156.

41) Ibid., p. 83.

야 할 것이다. 프랑케나는 “분배정의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우 또는 취급에 있어서의 평등함(equality of treatment)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정의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sup>42)</sup>

#### IV. 결론: 종합적 분배정의론

(A Comprehensive Theory of Just Distribution)<sup>43)</sup>

필자는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노사갈등과 사회전반의 갈등을 해소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들로서 다음의 ‘종합적 분배정의론(A Comprehensive Theory of Just Distribution)’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능한 한 최소의 악 및 고통과 최대 최상의 선 및 행복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과 행동을 지향할 것을 제시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과학적 문화적 발전과 풍요로운 물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으로 활용하여 최대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결과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각자의 능력과 노력 및 기여도를 존중하여 공로에 따라 선과 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단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최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개인의 노력과

42) Frankena, *Ethics*, p. 51.

43) cf., 김희수, “한국사회와 분배정의에 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편 (서울: 도서출판 선학사, 2000), pp. 89-91.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양을 분배하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각자의 창의력과 성취욕을 둔화시켜 사회를 퇴보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인종, 성, 종교, 신체적 정신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이 분배를 위한 공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똑 같은 능력과 노력과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교육수준이 낮다고 해서 소수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회의 각종 혜택이나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조건들에 상관없이 각자의 능력, 노력, 기여도에 대하여 평등하게 인정받아야 하며 또 그에 따른 분배를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

넷째, 은혜와 박애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 여성, 노약자, 고아, 최수, 중소기업, 농림어업,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의 삶의 질과 기회가 최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maximin’의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능력과 노력 및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의 혜택 및 재화의 분배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능력과 기여도만으로 분배의 기준을 삼는 것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방법이다. 가장 약하고 불리한 삶의 조건 속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적정선까지는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의 상품 생산과 판매 그리고 분배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sup>44)</sup>

44) 참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 1997년 제정)에 의하면 노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 전환, 재훈련·해고 등 고용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소속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각 분야별(기술개발, 판매, 디자인, 경영 등)로 전문가들(이들 또한 근로자이므로)이 업무를 분장하여 각기 맡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총체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가 자신들의 복지만을 생각하며 임금상승과 고용안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무조건 수혜자의 입장에서만 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들도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발전, 공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각자의 이익추구에만 고착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힘의 균형 성취 및 유지, 중재역할, 정당한 법과 제도의 수행을 위한 정부의 조정자(coordinator) 역할과 정당한 힘의 사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이루어내고 유지하며,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중재자, 조정자, 감시자, 심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독재자로서 군림하는 정부는 안되지만 정당하게 힘을 사용하여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조정자와 심판으로서의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국네슬레 이삼휘 사장은 “노조 지도부가 불법 파업을 해도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정면 대응을 주저하는데 대해 본사에서는 이해할

---

조정자의 일반 원칙,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등 14개 항목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확장·합병·공장이전·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 결정사항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sup>45)</sup> 특히 민주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조의 경영참여 주장은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기업가들에 의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착취당하던 때와는 달리 과도한 노동운동과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과 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엄정한 법과 원칙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들과 사회 구성원 전체는 기업가들을 돈에 눈이 먼 약한들로 몰아 부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뛰고 있는 대표선수들로 인정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기업가들 역시 근로자들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싸움꾼들로 몰아 부칠 것이 아니라 기업발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동지요전사들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노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정당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업가들과 근로자들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하여 상호부조와 적당히 양보할 줄 아는 유연성, 인내, 포용성, 의리, 동지애를 가지고 각자의 임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쟁의 시장원칙을 토대로 한 경제원칙이 존중되고, 개개인의 인권과 창의력과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으며, 약자의 삶의 질이 보장받으며,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룬 복지사회, 다양한 인종과 성 및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기적 욕구를 자제하고 양보

45) 조선일보, 2003. 9. 3.

하며 서로를 포용하여야만 한다.

## 참고문헌

- 노동부 - “년도별 분쟁건수와 주요원인” (2003)  
산업자원부 - “외국인(기업) 한국 투자진출시 주요 장애요인” (2003)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3. 7. 28.)  
조선일보, 2003. 7. 28; 8. 14; 9. 3.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 - “소속계층의식 조사” (2003)  
통계청 - “2003년 7월중 연령별 실업자 수”  
한국생산성본부 - “국가별 노동생산성 비교” (2003. 1. 2.)  
한국은행공보 2003-10-1호  
한국은행 - “국내 설비투자 추이” (2003)  
USA, BLS, “Hourly Compensation Cost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외 비용 비중 국가간 비교”  
김희수, “한국사회와 분배정의에 관한 기독교윤리적 성찰,” in 『기독교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편 (서울: 도서출판 선학사, 2000)  
Bennett, John. “Reinhold Niebuhr's Social Ethics,” in *Reinhold Niebuhr: His  
Religiou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ed. Charles W. Kegley and Robert  
W. Bretall. New York: Macmillan, 1956.  
Frankena, William K. *Ethics*, 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73.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Scribner, 1932,  
1960.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New York: Scribner, 1943, 1964.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obertson, D. B. ed.,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Gloucester, Mass.: Peter Smith, 1976.

## ABSTRACT

### Social Justice in Social Conflicts

Kim, Hee Soo  
(Cheonan University)

Many Koreans have a strong feeling of comparative poverty and unfair distribution. In this situation, laborers have been fighting to get a greater share of the profits. Sometimes they use extreme methods such as committing suicide. To a certain degree, laborers' requests are accepted as reasonable, but people are now feeling that the laborers' requests are too demanding and hard on the national economy to satisfy. Thus, what is the proper level of just distribution? The proper level cannot be decided by looking at only the business owners' voice or the voice of the laborers. To find out the just level of distribution, we must consider multiple elements like businesses' general capability, the economic power of country, the competitive power of businesses and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above all, the harmony and wholist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Taking these into account, first, this article will analyse such statistics as the number of work hours, wages, the productivity of labor, extra expenses for laborers, and so on, to estimate the fairness of laborers' requests. Second, this article will suggest ethical principles for a just distribution. Third, it will suggest the role of gover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just society and for the peaceful and wholistic development of the country.